

〈일반논문〉

관동대학살에 대해 해외 조선인이 생산한 문건과 그 성격

김 강 산 *

〈목차〉

- I. 머리말
- II. 외교적 대응을 위한 '항의문'
- III. 정치적 목적을 담은 '선전문'
- IV. 사건의 전승을 위한 '기록물'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23년 9월 발생한 관동대학살 이후 해외의 조선인들이 인식한 사건의 일단과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조선인들이 생산한 문건에 주목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들 문건은 각각 '항의', '선전', '기록'의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과 조선인 학살의 비인도성, 피학살 조선인의 '무고함'을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문건은 작성 시점, 대상, 작성 주체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해외 조선인들의 인식이 단 일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조선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능동적으로 전유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대응방법 역시 다르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게 표출되었다.

이 문건들은 당대의 조선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학살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조선인 학살의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특히 식민권력의 은폐시도에 맞서 조선인 학살의 '기억'을 남기고자 한 하나의 대응방식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 주제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동대학살, 임시정부, 한국친우회, 유덕고려학우회

I. 머리말

체코 출신 프랑스 작가 밀란 쿤데라는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라고 말했다.¹⁾ 소비에트 체제에 저항하던 체코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억하려는 행위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차원을 넘어, 약자에게 중요한 투쟁의 방식인 것이다.

1923년 9월에 발생한 관동대학살은 식민지 지배권력과 피지배 민족이 한 사건의 ‘기억’을 두고 대립했던 하나의 사례이다.²⁾ 식민권력은 이 사건

1) 밀란 쿤데라 저·백선희 역, 『웃음과 망각의 책』, 민음사, 2012.

2) 이 사건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필자는 사건의 핵심이 ‘재난’이 아닌 ‘학살’에 있었다는 점, 당시 죽음을 맞은 사람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지만, 일부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 오키나와인도 학살당한 사례를 감안하여 ‘관동대학살’로 부르고 있다.

이 자신들의 통치와 지배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피학살자인 조선인을 폭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폭동의 진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표상했다. “학살된 조선인은 단 두 명뿐”이라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발표는 사실상 학살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는 식민권력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³⁾

반면 동포의 죽음에 분노한 조선인은 학살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인 예가 1923년 10월 동경에서 결성된 ‘재동경이재조선동포위문반(在東京罹災朝鮮同胞慰問班)’의 조사활동이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학살이 벌어졌던 관동(關東) 지역을 돌며 조선인 학살 사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같은 해 12월 동경조선인대회(東京朝鮮人大會)에서 발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식민권력의 망각 시도에 맞서 문혀져가는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 투쟁의 일환이었다.⁴⁾

이 글의 문제의식은 식민권력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해 조선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떠한 대응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조선인들이 생산한 문건들에 주목하여 그들의 인식과 대응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위문반의 조사활동이 관동대학살에 대한 조선인의 한 대응 방식이었다고 한다

3) 《報知新聞》 9월 21일자에 실린 사이토 마코토의 담화를 보면 “지난 10일 급히 상경하여 사실의 진상 여부를 탐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조선인 피해로서는 겨우 2명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4) 이하 위문반으로 약칭함. 위문반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서를 참조할 것(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김인덕,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15; 김강산, 「관동대학살에 대한 재일본조선인의 대응-재동경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5, 2021).

면, 이후 중국, 러시아, 미주, 유럽, 일본 등지의 조선인들의 생산한 문건들은 일본정부에 조선인 학살을 항의하고, 학살의 사실을 선전하며, 식민 지배의 본질이 극단적인 폭력에 있음을 세계에 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는 관동대학살 이후 해외 조선인들의 움직임에 관하여 각 지역 단위에서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⁵⁾ 홍선표는 독일지역의 유덕고려학우회와 미주지역의 한국친우회,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아 조선인의 언론·선전 활동을 ‘진실규명’ 차원에서 분석했다. 김인덕은 관동대학살 이후 일본 내 조선인 단체에 주목하여 그들의 활동을 조선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천도교·기독교 그룹과 일본정부가 주도한 지진의 사후처리에 적극 협력한 상애회 계열로 구분했다.⁶⁾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 조선인 사회주의 단체와 일본인 사회주의 단체가 분열한 것으로 보았다. 장세윤은 『독립신문』의 보도에 주목하여 사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가 현재까지도 국내외 학계, 교육계에 큰 영향을 남기고 있다고 보았다.⁷⁾ 이명화는 관동대지진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며, 이후 모든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이 모색되었다고 밝혔다.⁸⁾ 특히 가장 최근에 발간된 성주현의 연구서가 주목된다. 성주현은 해외 조선인의 활동을 중국관내·만주,

5) 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歐美 한인세력의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43, 동북아역사재단, 2014.

6) 김인덕, 「상애회(相愛會) 연구-1920년대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2002; 김인덕,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15.

7)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림』 46, 2013.

8) 李明花, 「關東大震災と韓國獨立運動」, 『코리아연구』 5, 2013.

일본, 미주, 유럽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지의 활동을 망라적으로 분석하면서 전체상을 그려냈다.⁹⁾ 이상의 연구들은 관동대학살에 대응한 해외 조선인들의 활동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높다.

이상의 연구들은 조선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대체로 일관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 증점적으로 살펴볼 ‘문건’들을 살펴보면 상이한 인식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도 달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특히 두 가지 지점을 주목한다. 첫째, 조선인들이 표상하고자 했던 사건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식민권력의 ‘불령선인’ 만들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생산한 문건을 통해 어떤 정치·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각 문건의 생산주체와 목적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강조되고, 삭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문건의 목적에 따라 장과 절을 구성하였다.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강덕상이 편찬한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¹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독립기념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공훈전자사료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해당 내용은 제3장 제3절 〈관동대지진과 국외 한인사회의 동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선인, 2020).

10)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

II. 외교적 대응을 위한 ‘항의문’

1. 임시정부의 외교적 대응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關東)지역에서 규모 7.9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약 2주일간 관동 전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오키나와인,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지진이 학살로 전화(轉化)하게 된 데는 유언비어와 계엄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진이 발생한 당일부터 도쿄와 요코하마에서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른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유언비어가 확대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경찰과 행정을 관할하던 내무성이었다. 내무성은 9월 2일 오후 해군의 무선송신소에 전령을 보내 조선인들이 “불령(不逞)”한 짓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국으로 타전하게 했다. 그 결과 9월 3일 지바(千葉)현 내무성 경보국장의 「전문」이 후나바시(船橋) 해군 무선 송신소를 통해 전국의 현 지사 앞으로 타전되었다.¹¹⁾ 「전문」은 국가기관인 내무성에서 ‘조선인 폭동’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로 인정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인에게 “불령의 목적”을 이루고자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었다.

이에 더해 조선인 학살에 ‘권위’를 부여한 것은 일본정부가 시행한 계엄령이었다. 계엄령은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로써 간주하게 함을 넘어서, 군대와 민중에게 학살의 ‘권한’을 주었다. 지진 직후 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선포된 계엄령은 9월 3일 도쿄, 요코하마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11) 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105쪽.

9월 4일에는 지바, 사이타마 지역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때의 계엄령으로 최고 6만 4천여 명의 육군 병력과 전국에서 소집된 경찰력, 관동 수역(水域)에 집결한 기함 150척 등 경계를 위해 총력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학살은 자행되었다.¹²⁾

한편 일본정부는 조선인 학살 사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무성 경보국은 지진 발생 직후 전국 각 신문에 “질서의 회복, 인심의 안정 및 구호에 대한 언론기관의 협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기사 취재의 주의에 관하여”라는 통첩을 송달했다. 경보국 신문검열계에서는 매일 2회에 걸쳐 신문원고 검열을 실시하고, 발매 또는 반포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전검열 조치를 내렸다.¹³⁾ 그 결과 조선인 학살에 관한 언론의 게재는 통제되었다. 조선총독부도 일본정부의 강력한 언론통제정책에 발맞추어 조선인의 도항(渡航)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국내의 조선인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¹⁴⁾

이러한 이유로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해외 조선인들은 일본 내에서 조선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식민권력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임시정부 역시 9월 초순까지 조선인 학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지진 내용이 최초로 언급된 9월 4일 자 독립신문의 「호외」에는 일본 내의 피해 상황이나 주요간부의 암살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실려있었다. 그밖에도 지진, 폭풍,

12)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005, 31쪽.

13) 이연,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7, 1992, 355~356쪽.

1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편철한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은 1923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조선 안팎의 정황을 다룬 문건들을 모은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주목하고 있는 조선인의 동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검색일 2022.6.25)).

해일 등 천재지변에 관한 내용이거나 인명과 건물피해에 주목하고 있었다.¹⁵⁾ 재난을 다룬 일반적인 보도였던 것이다.

임시정부가 조선인 학살을 파악하게 된 것은 9월 7일이었다. 임시정부는 그 즉시 긴급각료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¹⁶⁾ 그리고 그 ‘대책’으로써 1923년 9월 10일, 외무총장 조소앙(趙素昂)의 명의로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權兵衛)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임시정부 항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정부가 관동(關東)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살기(殺氣)가 일어 천재지변과 화를 한국인에게 전가하여, 방화자도 한국인이요, 폭탄을 투척한 자도 한국인이라고 하며, 군사를 일으키며 전쟁을 선포하고 큰 적을 만난 것 같이 민군(民軍)을 부추겨서 무기를 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노인, 어린아이, 학자, 노동자 할 것 없이 한국인을 대량 학살하였으며, 물불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찢러 죽였다. (중략) 그렇게 재민(災民)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물며 이렇게 재해 지역에 있던 한인은 흠뻑 단신 그곳에 남아 돌아오지도 못하고 살 길을 모색하던 사람들이다”¹⁷⁾

「임시정부 항의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학살의 원인으로 ‘유언비어’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정부는 유언비어가 무고한 조선

15) 〈東京을 中心으로 한 敵國內의 大地震: 地震, 暴風, 海嘯, 大火가 竝起하여 全市가 焦土로 化함〉, 《獨立新聞 號外》, 1923.9.4.; 在間島總領事鈴 木要太郎→ 外務大臣 男爵 伊集院彦吉, 「機密 제87호, 제목 미상」, 1923.9.22.

16)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2),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情報 (2)」, 날짜 미상, 1~2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17) 〈我臨時政府에서 敵政府 抗議 提出〉, 《獨立新聞》, 1923.9.19. (이 문건은 별도의 제목이 없다.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있다. 이하 「임시정부 항의서」로 지칭한다.)

인을 ‘적’으로 만들었으며, 이에 현혹된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고 보았다. 이때 유언비어 생성의 주체는 ‘사람들’이다. 유언비어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퍼졌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이 시점까지는 유언비어 생성·유포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이후 생산된 문건들에서 유언비어의 생성과 유포 과정에 일본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다. “군사를 일으키며”, “전쟁을 선포하고”, “무기를 들게” 했다는 서술이 근거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명령이 조선인 학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는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대처가 사실상 조선인을 ‘적’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았고, 자신들도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임시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조선인’의 모습이다. 전술한 『독립신문』의 「호외」에서는 조선인들의 폭동을 대체로 사실로써 인정하고 있었다. 도쿄·요코하마 지역 조선인들이 지진을 기회삼아 아카바네(赤羽) 등 화약고를 폭파하려는 시도가 있다거나, 도쿄에서 추방된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해 하치오지(八王子)에 침입하여 제13사단과 충돌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임시정부 항의서」는 조선인 폭동 사실과 불령선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조선인 학살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항의서」에 묘사된 조선인은 일본인과 똑같이 피해를 입은 “재민(災民)”이자, “무고한” 사람들임을 강조한 것이다. 즉 “무고한” 이들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마치 전쟁포로처럼 수

18) 在間島總領事鈴 木要太郎→外務大臣 男爵 伊集院彦吉, 「機密 제87호, 제목 미상」, 1923.9.22.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62~563 쪽에서 인용)

용소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이 임시정부가 파악한 조선인의 상태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는 말미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불법·강제로 수용된 1만 5천 명의 한인을 석방할 것. 둘째, 모든 재해구역에 있는 한인의 생사여부와 성명, 연령, 주소, 업적을 조사하여 발표할 것. 셋째, 한인을 잔인하게 죽인 폭도는 관민의 구분 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받은 후 5일 안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¹⁹⁾

「임시정부 항의서」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은 어땠을까. 『독립신문』 10월 13일자에 「한인 학살에 대한 적의 발표」라는 기사에 그 내용이 확인된다.²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조선인 폭동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선인과 일부 중국인이 죽음을 맞은 것은 “격앙된 민심”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조선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선인 폭동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선인과 중국인이 희생되었으며, 국가(일본)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임시정부의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뿐 아니라 ‘불령선인’의 존재로 인해 조선인들이 학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살의 책임을 조선인에게로 돌렸다.²¹⁾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대응이 항의 문건을 보낸 정도로 그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임시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한 경찰당국의 문서에 따르면 무력적인 활동을 전개

19) 大韓民國臨時政府外務總長 趙素印→ 大日本帝國外務大臣 山本權兵衛, 「外務部發 131호, 제목 미상」, 1923.9.10.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64쪽에서 인용)

20) 강효숙은 「임시정부 항의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답변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련하여 성주현은 《독립신문》에 실린 일본정부의 답변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강효숙,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2013, 94쪽; 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208쪽).

21) 〈韓人虐殺에 對한 敵의 發表〉, 《獨立新聞》, 1923.10.13.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독립군 각 진에 중대한 명령을 전해 북간도 지역의 독립단체에 결사대 지원자를 선발하고 폭탄 투척을 연습한다거나, 총동원령을 내리고 활동을 개시하려고 한다거나, 국무원을 통해 포고문을 작성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²²⁾

비록 외교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임시정부 항의서」는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대응을 요구한 유일한 ‘외교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이 문건이 『독립신문』에 실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 문건의 목적은 선전·선동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해질 목적으로 작성된 외교문건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와 같은 책임을 묻기보다, 비교적 정제된 표현을 통해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처리’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한국친우회의 대 미국정부 교섭

미주사회에서도 외교행위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23년 11월 23일 한국친우회가 미국의 국무장관인 휴즈에게 보낸 「한인학살 항의문」이 그것이다.²³⁾ 이 문건은 당시 한국친우회의 회장이었던 플로이드 톰킨스(Floyd W. Tomkins)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총 10페이지 분량이다.

1919년 4월 결성된 이후로 한국친우회의 회원은 조선의 독립을 지지

22) 朝鮮總督府 警務局, 「高警 제3093호 (13), 京浜地方震災に關する國外情報 (13)」, 1923.10.5.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56~557쪽에서 인용)

23) 이 절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한국친우회의 관동진재 한인학살 항의서」, 1923.11.22.)

하는 미국인과 조선인 유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각 지부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선전 활동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동대학살의 전파와 항의문 작성 과정에서도 조선인 유학생들이 일정하게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⁴⁾

「한인학살 항의문」의 목적은 관동대학살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데 있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인 학살의 내용을 미국인의 체험담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한인학살 항의문」에 실린 구체적 사례는 두 건이다. 하나는 요코하마 부두의 부감독자이며 일본에서 수 년 간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 헤드 스트롬 대령의 진술이다. 그에 따르면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을 죽이기” 위해 공식적인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그 명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50명의 조선인이 손발이 묶인 채 산채로 불태워졌다고 증언했다. 다른 하나는 또 다른 미국인 스티븐스(W. H. Stevens)의 체험담이다. 그는 일행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학살 현장을 지나다가 일본군에 의해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은 스티븐스 일행에게 조선인 시체 위로 차를 몰게 했으며, 만일 불복종하면 조선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언급한 두 사건은 조선인 학살이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티븐스의 경우 단순히 목격담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이 사례는 일본군이 미국인에게도 학살에 가담하도록 협박·강요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이 사건에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24) 홍선표에 따르면 한국친우회는 1919년 서재필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3.1운동 이후 선전활동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친우회는 미국 각지를 비롯해 유럽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는 서재필을 비롯해 이승만과 정한경, 그리고 각 지역 한인 유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홍선표, 「徐載弼의 獨立運動(1919~1922)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219~230쪽).

한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정부가 조선을 도와주어야 할 근거를 1882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종의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학살 항의문」에는 “1882년 미국의 예를 따라 선도적인 힘을 가진 14개 국가들이 한국을 돕고 보호한다는 공식적인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라며, “우리는 우리가 맺은 조약의 의무감을 너무나 오랫동안 도외시하여 우리의 의무를 잊어버린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은 폐지되지 않은 공법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는 인도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 학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일본정부의 ‘언론통제(검열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지진 직후 조선인이 약탈을 일삼는다거나, 우물에 독약을 뿌린다거나 하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지만, 일본은 이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인 폭동설을 사실로써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친우회의 「한인학살 항의문」에 대하여 주미 일본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하였다. 언급된 두 건의 학살 사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본정부가 조선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 지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며, 556명의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거나 재판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범죄”로 뭉뚱그려 표현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알기 어렵고,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또 일본 대사관은 조선인 폭동 사실을 매우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폭동을 저지른 조선인에게 있다고 강변했다. 조선인들이 사

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들과 협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다며, 일본 민중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⁵⁾

이 장에서 살펴본 두 문건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그들은 조선인들이 ‘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가가 만들어 낸 ‘불령선인’의 이미지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인 학살의 책임이 일본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임시정부 항의서」에서 “전쟁”을 언급한 것이나, 「한인학살 항의문」에서 “공식적인 명령”을 언급한 것은 그러한 이유였다. 그러나 두 문건은 구성과 내용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두 문건이 각각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차이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조선인 학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폭동을 일으킨’ 조선인에게 돌렸던 것이다.

Ⅲ. 정치적 목적을 담은 ‘선전문’

1. 독립운동의 열기 고취

관동대학살 이후 중국·만주, 일본, 독일, 미국 등지의 조선인들은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담은 선전문을 제작하였다. 그것은 격문, 호소문, 선언문, 성명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각 선전문에서 보이는 특징은 주체와 지역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다르다. 다만 내용상 강조하고 있는 바

25)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한국친우회의 관동진재 한인학살 항의서」, 1923.11.22.

를 대체로 유형화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지진을 독립운동의 좋은 기회로 여겨 국내외 조선인들에게 호응을 독려하는 경우다. 특히 지진 직후 중국·러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문건에서 주로 보인다. 일본의 지진 피해를 하늘이 내린 벌(天罰)로 묘사하며, 패망의 징조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독립신문』 9월 3일자 「호외」가 대표적인 사례다. 「호외」에서는 일본 각 지역의 피해와 당시 야당이었던 정우회(政友會) 간부의 암살설, 야마모토 곤베에의 습격설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 50년 군벌정치의 흑독한 죄악에 대한 댓가”로, “도쿄는 이미 도시를 유지할 여력이 없어”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시기적으로 보면 「호외」가 생산된 시점은 조선인 학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좋은 기회로 여기는 정도였다. 조선인 폭동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도 해당 사건을 조선인이 벌인 물리적 투쟁으로써 전유(專有)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 학살 소식이 전파된 이후에는 일본정부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분노감’을 자극하여 독립운동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문건들이 다수 발견된다. 상해지역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 판의단(判義團)이 작성한 「비격문(飛檄文)」이 대표적이다. 이 문건은 9월 중순 경 북경에서 제작되어 만주 지방에 뿌려졌다. 그 중 철령육영학교(鐵嶺育英學校) 교장이었던 장우근(張宇根)에게 보내진 것을 일본 영사관에서 입수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전문이 남아있다.²⁷⁾

26) 〈東京을 中心으로 한 敵國內의 大地震: 地震, 暴風, 海嘯, 大火가 竝起하여 全市가 焦土로 化함〉, 《獨立新聞 號外》, 1923.9.4.

27) 在鐵嶺領事 岩村成允 → 朝鮮總督府警務局長 丸山鶴吉, 「不穩印刷物に關する件」, 1923.9.26.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61~562쪽에서 인용.)

「비격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현 상황을 독립운동의 ‘호기’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무고한” 조선인들이 국가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당했음을 강조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다른 문건도 존재한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같은 시기 블라디보스토크 고려공산당 본부도 지진 상황을 이용하여 조선 내에서 봉기를 도모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비격문」을 발표하기도 했다.²⁸⁾

상해 지역의 조선인들도 교민대회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10월 중순 윤기섭, 여운형 등 20여 명이 모인 교민대회의 결과 「경고서」를 작성하고 중국, 간도, 노령, 하와이 등지에 1천 부를 배포했다. 문건의 제목은 「경고서」이지만, 사실상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성명서 혹은 격문에 가깝다. 「경고문」 서두에서는 “적의 이번 진재는 기이한 재난이다. 일시에 폭발하여 형적도 없게 되었으니 실로 천벌이라 할 것이다”라며 ‘천벌론’에 기댄 인식을 보인다. 또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살을 언급하면서, “무엇 때문에 보잘것 없는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가. 보존코자 하나 보존할 수 없다. 우리는 살길을 개척하지 못하면 죽을 뿐이다.”, “동포들아, 우리는 분발하여 일어서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살기 위하여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지 않아서는 아니되겠다”고 하며 조선인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 부록인 〈同胞虐殺의 彙報〉에서는 각지의 신문보도를 종합해 9월 말까지의 조선인 학살의 실황을 전하고 있다.²⁹⁾

그런데 대지진을 일본 정부 패망의 시발점으로 보고 ‘호기’로 여기는

28)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4),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情報 (4)」, 1923.9.21., 6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29) 在上海總領事 矢田七太郎→ 朝鮮總督府警務局長 丸山鶴吉, 「機密 제225호. 제목 미상」, 1923.10.26.(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72~573쪽에서 인용); 최승만, 「極熊筆耕」, 최승만문집출판동지회, 1970, 181~182쪽.

인식은 비단 조선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국·러시아 지역에서는 신문, 격문, 성명서와 같은 각종 선전물들이 제작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의 신문 「Krasnoye Znamya(크라스노즈나미야)」는 이 지진으로 인해 정우회 간부 20명이 암살당했고, 결국 일본정부의 쇠락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³⁰⁾ 연해주의 소비에트 집행위원회에서도 일본 군대의 시베리아 주둔을 비판하며 일본 무산자 계급에 대한 구호와 연대를 선동하는 성명을 배포하기도 했다.³¹⁾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가장 염려한 것은 이러한 선전 문건들이 조선과 일본에 전해지는 것이었다. 실제로 구체적인 실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재해 구호의 목적으로 출발한 ‘심비스크’호에 “적화 선전 문서”를 싣고 일본어에 능숙한 “불령선인”이 승선했다고 전하고 있다.³²⁾ 길림지역에서도 “이석주(李錫周, (이상룡, 李相龍)), 이탁(李鐸), 여준(呂準), 박관해(朴觀海), 윤매산(尹梅山), 류시준(柳時彥), 방직성(方直成), 남군명(南君明), 왕삼덕(王三德), 성정필(成正弼), 김응섭(金應燮), 곽종육(郭鍾毓) 등을 중심으로 남북 만주의 불령단을 통일하고, 길림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조선 내에 총 기관을 경성에 두어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고 조선 국경 안에 무력 침입을 결행하고자 한다”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³³⁾

특히 의열단의 동향에 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

30)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4),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情報 (4), 1923.9.21., 7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31)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4),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情報 (4), 1923.9.21., 6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32)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國外的 形勢에 鑑한 查察警戒를 엄밀히 할 件」, 1923.9.13., 4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33)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4),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情報 (4), 1923.9.21., 1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다. 간추려 정리하면, 북경에 체류하고 있던 김원봉이 의열단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으고 폭탄을 입수해 비밀리에 조선에 단원을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 9월 19일 모처에서 태극기 아래 ‘홍혈서원식’을 거행하고, 독립선언서 및 조선혁명선언서를 낭독하며, ‘살해당한 단원의 복수’³⁴⁾를 위해 비밀스러운 행동을 취할 것을 밀의하고 있다고 보았다.³⁵⁾

실제로 이 ‘선전물’들이 조선에 얼마나 뿌려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조선 내에서 활동을 추진하던 의열단의 움직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즉, 관동대학살을 계기로 물리적 투쟁을 전개하려던 움직임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총독부의 가장 큰 염려가 이 사건을 계기로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것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의 철저한 통제가 총독부 입장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정부의 야만성 강조

일본정부는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조선인 학살을 숨기기 위해 ‘조선인 폭동설’을 유포하는 선전전(宣傳戰)을 펼쳤다. 한 예로 자카르타 총영사 대리인 나카타니 쇼죠(中谷正造)가 외무대신에 보낸 문서에는 각 지역 신문사에 조선인들의 ‘범행 사실’을 선전하는 문서를 보내 그것

34) 관동대학살 당시 의열단이 언급한 ‘의열단원 학살’에 대해서 실제 사실은 찾기 어렵다. 경찰 문서에 언급된 내용이므로 의열단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35)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13),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 情報 (13)」, 1923.10.5., 1~2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문건은 앞쪽 일부가 잘려있다. 이 문건의 전문은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56~55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을 게재하도록 유도했고, 실제로 「재난 당시 반항적인 한국인들(Opstandige Koreanen gedurende de rampdagen)」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선전물’은 조선인의 무고함과 학살의 야만성을 강조함으로써, 식민권력의 ‘기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는 독일의 한인사회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가 작성한 「재독한인회 성명서」이다.³⁷⁾ 이 문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원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병합과 3.1운동을 거치며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탄압했음을 날낱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 관동대학살임을 주장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후반부는 그들이 파악한 사건의 전모를 신고 있다. 그 내용은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한 부르카르트(Burkhardt) 박사가 1923년 10월 9일 『보쉬셰 자이퉁(Vossische Zeitung)』지에 실은 「일본에서 지진을 목격한 베를린 사람(Ein Berliner Augenzeuge des Erdbebens in Japan)」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³⁸⁾

「재독한인회 성명서」는 국외에 알려진 것과 달리 학살당한 조선인이 ‘폭도’가 아니라 ‘무고한’ 존재였으며, 유언비어에 의해 희생당한 자들이라

36) 在ハタビヤ總領事代理 中谷正造, 『不逞鮮人暴行事件に關し蘭字新聞に掲載の件』, 1923.10.25.

37) 유덕고려학우회는 1921년 1월 1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학생 자체의 발전과 친목 도모, 한인 자치와 선전·외교 활동을 주관하는 것이었다. 관동대학살 당시의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歐美 한인세력의 대응」, 2014).

38) 이후 부르카르트는 《독립신문》에 자신이 목격한 조선인 학살을 증언했고, 〈뿌박사 방문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 성명서가 주목되는 것은 유언비어의 유포 주체로 ‘군대’를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령선인’, ‘폭동을 일으키는 조선인’의 이미지가 일본 국가(군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또 당시에 발생한 ‘폭동’은 조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요코하마의 한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한 일본인 죄수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선인 학살에 관하여는 잔인성과 비인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인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든 잔인한 군중들이 린치를 가했다”, “만일 누군가 별떡 일어나면 그것은 새로운 대량학살의 신호가 되었다”라며, 조선인에 대한 집단적 가해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술했다.

한편 중국지역에서는 11월 중순 경 재해지역에서 학살을 목격한 이원식의 구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정리한 문건인 「야만폭학(野蠻暴虐)한 일본관헌이 한국인을 도살한 참상」이 배포되었다.³⁹⁾ 똑같은 내용이 북경에서 발행된 『대동일보』에도 실렸다.⁴⁰⁾ 작성자는 알 수 없다. 이 문건에서는 군대와 자경단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실려 있다.

- ① 조선인 여학생 수십 명의 옷을 벗기고 능욕한 후 죽창으로 배와 생식기를 찌른 뒤, 사체를 길가에 내팽개쳤다.
- ②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은 일본인 부부로 가장하여 학살을 면했다.
- ③ 9월 7일 일본 육군은 한국 유학생 368명을 체포해 스미다가와(隅田川)에서 기관총으로 사살했다.
- ④ 자경단은 조선인 목사 김모(某) 부부 자녀 2명과 학생 7명을 체포해

39) 在奉天總領事 船津辰一郎, 「機密公 제138호, 不穩文書入手の件」, 1923.11.21.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67~569쪽에서 인용)

40) 在長春領事 西春彦, 「長春警 제5963호 (1), 新聞記事に關する件」, 1923.11.30. (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70~571쪽에서 인용)

죽창으로 죽이고 시신을 불속에 던졌다.

- ⑤ 9월 9일 오전 8시부터 해가질 때까지 참살당한 자가 100여 명이다.
- ⑥ 나라이노 병영에 구류된 조선인이 1만 4천여 명이며, 범인 취급을 받아 의복을 모두 벗기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외출도 허락하지 않고, 위반하면 총살당한다.
- ⑦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기차에서 2명의 조선인이 발각되어 차창 밖으로 던져졌다.
- ⑧ 중국 유학생과 노동자는 일본 청년단으로부터 조선인으로 오해를 받아, 명함 등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함께 살해당했다.

인용문은 수록된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학살의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가해자의 야만성과 비인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지진 피해지역인 관동 지역 바깥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살해가 있었으며, 조선인으로 오인(誤認)받아 살해당한 중국인 역시 다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문건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 역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연대의식을 끌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에도 조선인이 수용소에 억류 중인 상황임을 서술하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3. 무산자 계급의 연대 촉구

앞서 살펴본 선전물들은 대체로 조선인 학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재난을 당한 일본 민중과 중국인 또한 ‘피해자’로 보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보인 선전문건도 주목된다. 주로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들이 생산한 문건들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다. 가장 먼저 이러한 성격을 보인 문건은 1923년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 고려공산당 중앙총국에서 작성한

「선전문」이다. “고려노동군중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선전문」은 대지진을 맞아 피해를 입은 무산자 계급에 대한 연대의식을 드러냈다. 일본은 오랫동안 조선 민중을 오랫동안 탄압해왔지만, 일본의 노동자들은 재난을 맞아 큰 피해를 받았으니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군벌은 지진으로 “파멸”할 것이며, 장래 “신일본”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노동자 계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⁴¹⁾

또 일본 내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에게 호소하는 선전문도 주목된다. 한 사례는 1923년 10월 경 북경에서 배포된 문건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별도의 제목이 없는 이 문서에 대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는 없다면 서도, 북경대학에 재학중이었던 한진산(韓震山), 남공선(南公善), 장건상(張建相) 등 공산당 계열의 조선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이 문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은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사건’이다. 문건의 첫 머리부터 “일본정부의 오스기 사카에와 무고한 한인을 학살한 것에 대해 전국의 열심을 다하는 일진(日賑)제군에게 보고함”이라고 적혀있다.⁴³⁾

41)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17), 京濱地方震災に關する國外情報 (17)」, 1923.10.10.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59쪽에서 인용)

42) 朝鮮總督府警務局, 「高警 제3093호, 京濱地方震災에 關한 國外 情報 (19)」, 3~4 쪽;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

43) 오스기 사카에 사건이란 일본의 대표적 무정부주의자인 오스기 사카에와 그의 부인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토 노에(伊藤野枝), 6살 난 조카 다치마나 소이치(橘宗一)를 헌병이 살해한 사건이다. 학살의 주모자로 알려진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糟正彦)의 이름을 따 아마카스사건(甘糟事件)으로도 불린다. 이 사건은 조선인 학살의 광풍이 어느정도 지난 9월 16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동대지진 당시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사상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기 사카에와 관동대학살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김병진, 「관동대지진과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2015).

이 문건은 관동대학살 당시 학살당한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의 사례를 통해 일본정부의 탄압이 비단 조선인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조선과 일본 내 무산자 계급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 평민을 원조하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선동하고 있다.

동경조선노동동맹회가 작성한 「격문」이라는 문건에서도 일본 무산자 계급의 연대와 호응을 독려하면서 ‘가메이도 사건(緇戶事件)’을 언급하고 있다. 가메이도 사건이란 가메이도 경찰서에 예비구속되어 있던 노동조합 운동가 10여 명이 경찰의 요청을 받은 기병 제13연대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으로, 전술한 오스기 사카에 사건과 더불어 ‘3대 테러사건’으로 불린다.⁴⁴⁾ 「격문」에서는 “가메이도 사건은 비통한 동지의 학살이다. 증오해야 하는 그들의 횡포이다! 수없이 죽어간 동지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⁵⁾

그밖에 북경지역에서 적기단의 명의로 작성된 「통고문」에서도 오스기 사카에 사건을 언급하면서 “각 혁명단체는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을 취하며, 세계 무산군중은 일본의 잔혹한 만행을 공동으로 토멸(討滅)하여 인류의 공존 동책을 실현할 것을 절규하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⁴⁶⁾

그런데 지진 이후 일본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선인과 일본인 무

44) 관련하여, 강덕상은 조선인 학살과 오스기 사카에 사건, 카메이도 사건을 ‘3대 테러사건’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며, 세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덕상,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일본측의 ‘3대 테러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호, 1999).

45) 동경조선노동동맹회, 「同志に檄す」, 날짜 미상(독립기념관 소장자료 3-003889-091, 「동경 조선노동동맹회 격문」).

46) 長春警務署長, 「長春警 제6303호(2), 赤旗團の不穩文書配布に關する件」, 1923.12. 5.(姜徳相 編,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564~567쪽에서 인용)

산자계급에게 그 화살을 돌리려 했다는 사실은 조선인 학살 사실을 조사했던 제일조선인들이 대체로 공유했던 인식인 것 같다. 1923년 12월 말 도쿄에서 열린 ‘조선인대회’에서는 조선인 학살 사실을 조사한 위문반의 ‘보고회’가 함께 열렸다. 이 때 위문반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조선인 폭동설은 허위이며, 일본정부가 일본인 민심의 동요를 방지하여 조선과 일본의 무산계급을 분리하려는 정략에 의해 유언비어를 생성하고 유포했다는 것이었다.⁴⁷⁾ 5개 항 중 4개를 ‘유언비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듬해인 1924년 2월에도 동경에서 조선인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목적은 “각지의 조선 노동자와 연락을 취하여 크게 여론을 일으키게 하려”는 것과, “진재 당시의 자세한 형편을 기록한 문서를 만들어 세계 각국 정부에 보내고자”하는 데 있었다.⁴⁸⁾ 그리고 그 결과로 ‘재일선인단’의 명의로 「기억하라! 우리동포, 일본인이여!」라는 격문을 작성했다.

이 격문은 1923년 10월 이후 일본 내에서 조선인 학살을 조사했던 제일조선인들이 생산한 문건으로, 당시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해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관동대학살의 상(像)과 대응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문건이다. 일종의 격문 형태이며, 1개 면으로 되어있다.

이 격문의 내용 또한 오로지 ‘유언비어’의 실체와 그 배후를 밝히는 데 있다. 심지어 조선인들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에 관한 서술도 없다.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민중(자경단)들의 책임을 묻는 문구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작성자는 유언비어의 출처를 명백하게 ‘내무성’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언비어가 요코하마 형무소 내 수감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가나가와 현 경찰부와 내무성, 경보국이 주장하듯 당시 요코하마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입헌노동당의(立憲勞動黨) 야마구치 마사요

47)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員, 「在京朝鮮人狀況」, 1923.5, 82쪽.

48) 〈東京에 朝鮮人大會〉, 《東亞日報》, 1924.2.22.

시(山口正憲) 일파가 유포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또한 유언비어 유포의 목적은 “일본의 프롤레타리아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및 조선의 혁명적 민중운동자와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살의 총 책임자로서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와 경시총감 아카이케 아츠시(赤池濃)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는 전술한 후나바시의 무선전신을 통해서 「전문」을 발송하도록 명령한 것이 미즈노 렌타로이며, 그것을 실행한 것이 아카이케 아츠시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 결과 자경단이 조직되었고, 조선인을 학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재일선인단’은 학살의 총 책임자인 이 두 인물이 당시에 내각의 중요한 관리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었다. 따라서 문건의 제목과 끝에 “기억하라! 우리동포, 일본인이여!! 미즈노 렌타로와 아카이케 아츠시를!!!”이라고 외친 것이었다.

IV. 사건의 전승을 위한 ‘기록물’

1. 학살의 진상을 담은 두 가지 문건

해외 조선인들이 생산한 문건 가운데 외국어로 쓰여진 소책자 형태의 문건이 있다. 관동대학살의 원인과 과정, 피학살자 수 등을 낱낱이 정리해 그 사실을 세계에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 문건이 주목된

49) 유덕고려학우회가 「재독한인회 성명서」에서 유언비어의 출처를 요코하마 형무소의 수감자로 특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다. 하나는 김건(金健)의 명의로 작성된 「虐殺」이라는 문건이며, 다른 하나는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이다.

먼저 「虐殺」에 대해 살펴보자.⁵⁰⁾ 이 문건의 작성자인 김건(金健)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강원도 철원 출신일 가능성과 평안남도 평원군 양화면 출신으로, 고베관서학원(神戸關西學院)에 유학한 인물일 가능성을 적고 있다.⁵¹⁾ 그런데 1924년 판 『在京朝鮮人狀況』에 따르면,⁵²⁾ “최근 북경의 김건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된 책자 「虐殺」 원고와 같은 것도 수뇌부 한위건(韓偉健)에게서 몰래 그 실황조사서를 발췌·송부한 것을 인정함.”이라고 파악하고 있다.⁵³⁾

다음으로 살펴볼 문건은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이다. 이 문건은 총 12페이지이다. 간략한 소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영문으로 작성되었다.⁵⁴⁾ 문건 말미에 기록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 (By Koreans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에 의해 1924년 3월에 작성되었다.

두 문건의 작성 경위를 추론해보자. 필자는 이 두 문건이 하나의 모본(母本)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모본은 위문반의 「실황조사서」로 생각된다. 위문반은 19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12월 25일 재경조선인대회에서 ‘경과보고

50) 김건, 「학살」, 『한국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51) 김건의 실체를 김형규(金滢奎)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李明花, 「關東大震災と韓國獨立運動」, 『코리아연구』 5, 2013).

52)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員, 「在京朝鮮人狀況」, 1923.5, 82쪽.

53) 한위건은 1923년 9월, 조선에 일시 귀국하여 순회강연을 하고 있던 도중, 관동대 지진이 발생하자 ‘동경지방이재조선인구제회’의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고, 10월에는 동경으로 건너가 위문반의 간부로서 조사활동에 참여하였다.

54) By Koreans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1924.3.(독립기념관 소장자료)

회를 개최한 뒤, 해산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在京朝鮮人狀況』에서는 당시 성명서와 「실황조사서」 등의 ‘불온문서’를 따로 인쇄하여 국외에 몰래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술한 대로 한위건에 의해 국외로 송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위건에 의해 국외로 반출된 위문반의 「실황조사서」가 재판집을 거쳐 확인 가능한 두 건(「虐殺」,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의 문건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내용의 구체성이다. 두 문건은 학살의 주체와 방식, 각 지역에서의 학살 과정 등 해외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다수 실려있다. 특히 구체적인 피학살자 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타마, 지바, 군마 등 도쿄 외곽지역에서 벌어진 학살의 사실도 정리되어 있어 현지에서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는 구성과 내용의 유사성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도입부→일본정부의 계엄령 선포→학살의 주체와 방식(군대-경찰-자경단 순)→학살의 동기→일본정부의 태도변화→언론통제→호소의 순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인 서술의 유사성도 엿보인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보겠다.

① 군대와 경찰에 의한 학살보다 자경단의 잔인성을 강조한 서술

「虐殺」: “오히려 보통의 살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평범한 방식으로 죽인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② 조선인 여성을 학살한 자경단의 반응에 관한 서술

「虐殺」: “여자는 이렇게 죽이는데 묘한 맛이 있다고 웃으며 얘기하는 것이었다”

「Massacre of Koreans in Japan」: “여자들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는데라고 웃고 떠들면서 몸을 찢어 죽였다”

①의 경우는 군대와 경찰의 학살에 대한 서술 이후, 자경단의 학살을 서술하는 문단의 도입부에 쓰여진 문장이며, ②의 경우는 조선인 여성에 대한 학살을 묘사한 이후, 자경단의 일원이 보인 반응에 대해 쓰여진 문장이다. 이 밖에도 내용이 유사한 서술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두 문건은 위문반의 「실황조사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국어판 ‘보고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문건의 내용과 특징

두 문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상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학살원인을 ‘명령’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명령’이란 계엄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와 요코하마 시를 포함한 지진이 일어난 지역 근처의 6개의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서술은 계엄령이 선포된 권역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에서는 “한국사람이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든 보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여라는 특별명령을 내렸다”라며, 일본정부가 계엄령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직접적 살해’를 지시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⁵⁵⁾ 사실상 국가가 조선인 학살을 명령했기에 조선인에 대한 “사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살의 주체와 살해방식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체를 크게 세 집단(군대·경찰·자경단)으로 분류했다. 먼저 군대에 의한 학살은 기병대에 의해 하다에서 2,000명, 스미다가와 강변에서 400명, 시나가와에서 300명, 사이타마 현에서 400명이 사망했다고 기록

55) 「虐殺」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동경시 후나바시 무선전신을 경유, 관동 2부6현 전반에 대하여 한인 박멸을 명령했다”

하고 있다. 경찰서와 수용소에서 학살은 더욱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초기 일본정부는 조선인을 ‘폭도’로 이미지화하여 계엄령도 선포하고 유언비어도 유포·방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선량한 조선인’을 ‘보호’하고, ‘유언비어를 엄벌’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학살은 벌어졌다. 즉, 국가의 방침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사례를 적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인은 수용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민중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자경단에게 수용되어 있던 조선인을 ‘배급’하기도 했다.⁵⁶⁾ 그러므로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학살에 관여하였으며, ‘보호’ 자체가 ‘속임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경단에 의한 살해이다. 군대와 경찰의 학살에 비해 그 방식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며, “가장 비극적인” 방식의 학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작성자는 학살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야만적”이라고 하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불가항력 상태에 있는 조선인에 대한 야만적인 학살, 그 중에서도 부녀자에 대한 잔인한 방식의 학살이 바로 자경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학살의 동기로 ‘유언비어’를 지목하면서, 일본정부의 언론 통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에 있던 소수의 조선인이 일본 정부에 대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선인 폭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정부가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용소에 가두었던 것과 조선인들의 귀환을 방해했던 것, 세계언론에 ‘조선인 폭동설’을 유포하고 선전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넷째는 문건 말미에 세계에 대해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문건 모두 ‘비인도적’이며, ‘흉악하고’, ‘야만적인’ 일본정부의 행동에 대해 ‘문명

56) 공권력에 보호받고 있던 조선인을 자경단이 습격한 것은 조선인 학살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이다. 사이타마·군마 지역에서 발생한 ‘진보하라(神保原) 사건’, ‘혼조(本庄)경찰서 사건’, 나카센도(中仙道)에서의 학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된' 세계의 양심이 '도덕'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조선에 대한 도움에 나설 것을 호소하며 글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두 문건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라면, 차이점도 있다. 「Mas-sacre of Korean in Japan」의 경우, 조선인에 대한 외국인의 목격담이 추가로 실려있다. 특히 한 신문기자가 일본인 민중들이 조선인 6명을 참수(斬首)한 광경이나 소개지(疏開地)를 향해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조선인을 자경단이 습격하여 살해한 경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습격받았던 경우를 실으며, 야만적인 폭력이 비단 조선인에게만 향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Massacre of Koreans in Japan」에서만 피학살자 수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는 〈살해된 시체와 장소에 대한 목록〉이 실려있다. 관련한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피학살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살해된 시체가 발견된 경우는 7,861명, 살해된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3,249명, 경찰이 살해한 경우 577명, 기병대가 살해한 경우 3,100명으로 총 피학살자 수는 23,059명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곤란하다. 먼저, 1923년 당시 관동지방(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부, 가나가와현)에 있었던 조선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그 수는 14,144명이다.⁵⁷⁾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2만 3천여 명이 죽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발견된 시체'의 경우를 7,861명으로 적고 있는데, 이것을 피학살 조선인의 시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위문반원 최승만은 활동 당시의 기록을 상세하게 남겼는데, 그의 기록

57) 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71쪽.

에서도 피학살 조선인 시체 수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⁵⁸⁾ 또 이 문건에서는 집계된 숫자에 대해 “중앙공론의 편집자인 요시노 박사가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요시노 사쿠조가 파악한 조선인 피학살자 수는 위문반이 파악한 숫자와 동일한 2,631명이었다.⁵⁹⁾ 이는 작성자가 조선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두 문건은 위문반의 조사결과인 「실황조사서」를 정리하여, 조선인 학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세계에 전파할 목적으로 작성된 일종의 ‘보고서’이자, ‘선전물’의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다. 당대의 조선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학살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조선인 학살의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식민권력의 은폐시도에 맞서 조선인 학살의 ‘기억’을 남기고자 한 하나의 대응방식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관동대학살 이후 해외의 조선인들은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펼쳤다. 그 중 조선인들이 생산한 각종 문건들은 그들의 인식과 대응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유형화하면 외교활동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 ‘항의서’류의 문건, 관동대학살을 계기로 정치 사회적 목적을 획득하고자 한 ‘선언서’류의 문건, 조선인 학살의 진상을 기

58) 최승만, 『나의回顧錄』,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5.

59) 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196쪽.

록하고, 조선인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소책자’류의 문건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문건은 조선인 학살의 근본적인 책임을 유언비어 생성과 유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보았다. 또한 일본정부의 야만성과 비인도성을 강조하며, 조선인을 ‘무고한 희생자’로 표상하고자 했다. 또 선전을 통해 국내·외 지역에 조선인 학살의 사실을 알리고 세계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는 동포의 죽음을 마주한 피압박민족의 투쟁방식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건의 작성 시점과 주체, 목적에 따라 일정한 차이도 보였다. ‘조선인 폭동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문건이나, 중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학살을 강조하며 무산자계급의 연대를 시도한 문건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해외 조선인들의 인식이 단일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전유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건 발생 100주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진실 규명은 요원하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웹지어 사태’에서 목격했듯, 조선인 학살의 책임을 자경단에게 전가하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혐오의 시선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역사인식은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 전 조선인들이 관동대학살의 ‘기억’을 남기고자 애썼던 움직임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2022.06.29. 투고 / 2022.07.26. 심사완료 / 2022.08.11. 게재확정)

[Abstract]

Characteristics of documents produced by Koreans on the Kanto Massacre

Kim, Gang-s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 group of events recognized by Koreans abroad after the Kanto Massacre in September 1923, and their reactions. In particular, it was categorized by paying attention to documents produced by the Koreans. These documents had the purpose of 'protest', 'propaganda', and 'recording', respectively. In common, the purpose was to uncover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inhumanity of the massacre of Koreans, and the "innocence" of the murdered Koreans.

However, each document showed a big difference in content depending on the time of writing, the object, an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subject. This shows that not only was the overseas Koreans' perception of the Kanto massacre not unified, but they also actively tried to exclusiveize the case of the "Korean massacre."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ethod of responding to the event was also expressed differently.

These documents can confirm the reality of the massacre recognized by the Koreans of the time, and are still the basic data necessary to clarify the specific facts of the massacre of Koreans. In particular, it ha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countermeasure to leave a 'memory' of

the massacre of Korean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 to conceal it.

□ Keyword

Kantou Korean Genocide, Kantou massacr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The Great Meeting of Koreans in Germany

[참고문헌]

1. 자료

『東亞日報』

『獨立新聞』

『關東震災에 對한 情報』(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員, 「在京朝鮮人狀況」, 1923. 5.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6-關東大震災と朝鮮人』, みすず書房, 196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2. 단행본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2005.

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2008.

성주현, 『관동대지진과 식민지 조선』, 선인, 2020.

최승만, 『極熊筆耕』, 최승만문집출판동지회, 1970.

최승만, 『나의 回顧錄』,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5.

3. 연구논문

강덕상,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일본측의 '3대 테러 사건' 사관의 오류」, 『역사비평』 47, 1999.

강효숙, 『관동대진재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동북아역사재단, 2013.

김강산, 『관동대학살에 대한 재일본조선인의 대응 -재동경이재조선동포위문반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5, 2021.

- 김병진, 「관동대지진과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2015.
- 김인덕,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일본 내 운동세력의 동향: 1920년대 재일조선인 운동세력과 일본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9, 동북아역사재단, 2015.
- _____, 「상애회(相愛會) 연구 -1920년대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2002.
- 이명화, 「관동대지진재와 한국의 독립운동」,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90주년 심포지엄 발표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이연, 「관동대지진과 언론통제 -조선인 학살사건과 보도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7, 1992.
- 장세윤,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독립신문』의 보도와 그 영향」, 『사립』 46, 2013.
- 홍선표,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에 대한 歐美 한인세력의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43, 동북아역사재단, 2014.
- 홍선표, 「徐載弼의 獨立運動(1919~1922)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